

#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 정책 대응 방향

장동열 |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박수빈 | 도시사회연구부 전임연구원



## 배경과 목적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8세→13세)되면서, 아동수당은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제도로 재편되는 추세임
- 인천시는 아동수당의 연령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아동수당(0~7세)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8세까지의 학령기 초기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꿈수당'을 운영해 왔으나, 향후 제도 중첩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제안

- 인천시 아이꿈수당은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대응하여, 단순한 '연령 공백 보완' 역할을 넘어, 중앙정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책적 차별성과 기능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2016년생 등 과도기적 사각지대를 우선 보호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기준보다 한 템포 앞서 대상을 확장하는 '중앙정부 연동형' 방식과,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산 형성 기능'의 단계적 전환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 아이꿈수당은 단순 현금(바우처) 지원 사업을 넘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정책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아동의 보편적 기본권과 미래 역량 및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아동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함

# 1 정책 환경 변화: 정부 아동수당 확대와 인천시 현황

## 1. 정부 아동수당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로드맵

### ■ 추진 배경 및 정책 기초

-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 보장과 자녀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소득보장정책으로, 2018년 시행 이후 지급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음.
  - 도입 초기에는 소득 하위 90% 및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9년 소득기준 폐지 이후 보편화되었고, 2022년에는 지급 연령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함
- 그러나 기존 8세 미만 지원체계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 돌봄 및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이 급증하는 시기에 오히려 국가의 소득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님. 이에 따라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과 정책 체감도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이소영·이지혜·이철희, 2023; 이소영·이지혜, 2024)
- 이러한 정책적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아동수당을 영유아기 중심의 제한적 지원을 넘어 생애주기 기반 가족정책의 핵심 제도로 재정립하고 있음
  - 2025년 12월 발표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확대를 공식화하여, 아동 기본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관계부처합동, 2025)
  - 이렇듯 아동수당은 보편화와 연령 확대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확장 되어왔으며, 2026년 이후부터는 초등 전 학령기를 포괄하는 구조로 전환될 예정임([그림 1] 참조)

[그림 1] 아동수당 개편 과정



자료: 신가희·장동열(2024)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 ■ 2026~2030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계획의 주요 내용

- (지급 대상 확대) 2026년 1월,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추진됨(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2.4.;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6.3.23.)
  - 이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초등 전 학령기)까지 포괄하게 됨
  - 당장 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2017년생)이 새롭게 편입되어 학령기 초입 아동에 대한 소득 지원 공백이 일차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 (지급 수준 및 방식 다각화) 기존의 월 10만 원 기본 지급 구조는 유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이 새롭게 도입됨
  - 비수도권은 월 10.5만 원으로 상향,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월 12만 원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됨
- (정책적 성격 진화) 이러한 제도 개편은 아동수당의 구조적 진화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정책적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영유아 중심의 제한적 지원에서 벗어나, 초등 전 학령기를 포괄하는 생애주기 기반의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로 확대됨
  - 둘째, 동일 급여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이 결합되며, 보편성과 선택성을 동시에 갖춘 복합적 제도로 진화함
  -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및 추가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아동복지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과 긴밀히 연계되는 다층적 정책수단으로 확장됨
  - 종합하면, 아동수당은 '생애주기 기반 보편적 소득보장 확대 + 지역 차등 지원 + 지역경제·인구정책 연계'가 결합된 국가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이함

[그림 2] 2026년 아동수당 주요 개정 내용



자료: 연구진 작성

## 2. 인천시 아이꿈수당 운영 현황 및 정책 위치

### ■ 제도 개요 및 운영 구조

- 인천광역시 중양정부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 이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아이꿈수당’을 도입하였음
  - 이는 ‘학령기 양육비 부담’이라는 국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보완함과 동시에, 인천시 저출생 대응 브랜드인 「1억+아이(i)드림」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
- 아이꿈수당은 출생 코호트별로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로 설계됨
  - 도입 원년인 2024년에는 8세(2016년생)만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며, 이후 매년 1세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임. 중장기적으로는 2016년~2019년생 월 5만 원, 2020년~2023년생 월 10만 원, 2024년생 이후 월 15만 원으로 출생 코호트별 지급액이 상향되는 구조임(부록 참조)
- 사업 재원은 국비 보조 없이 전액 지방비(시·비·군구비)로 충당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달리, 아이꿈수당은 ‘인천e음 포인트(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특징임<sup>1)</sup>

[그림 3] 인천광역시 1억 + 아이드림의 주요 내용과 아이꿈수당 지원내용

**①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전국 최초,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

**② 주요 지원내용**

| 기초 (72백만 원)       | 확대·보완 (28백만 원)      |
|-------------------|---------------------|
|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  | · 천사(1040) 지원금: 8.4 |
| · 첫만남 이용권: 2      | · 아이(i) 꿈 수당: 19.8  |
| · 부모급여: 18        | · 임신부 교통비: 0.5      |
| · 아동수당: 9.6       |                     |
| · 보육료·급식비: 25.4   |                     |
| · 초·중·고 교육비: 16.5 |                     |

**모두 1억원**

현재 지원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에 더해 인천시는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③ 아이(i)꿈수당 지원내용**

**확대·보완정책 ② 전국 최초 아이(i) 꿈수당 (신설)**

대상: 8세~18세까지('24년 기준 '16년생부터 해당)

지원: 총 1,980만원 지원

\* '16년생~'19년생 월 5만원(총 660만원) : '24년부터  
 \* '20년생~'23년생 월 10만원(총 1,320만원) : '24년부터  
 \* '24년생부터~ 월 15만원(총 1,980만원) : '25년부터

**④ 유아기(아동수당)-학생기(아이꿈수당) 연계**

**요약 인천에서 태어난 아기가 받을 지원금은?**

| 임신기               | 150만원          |
|-------------------|----------------|
|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 100만원          |
| 임산부 교통비           | 50만원           |
| <b>유아기(0~7세)</b>  | <b>6,340만원</b> |
|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
| 부모급여              | 1,800만원        |
| 아동수당              | 960만원          |
| 보육료·급식비           | 2,540만원        |
| 천사(1040) 지원금      | 840만원          |
| <b>학생기(7~18세)</b> | <b>3,630만원</b> |
| 초·중·고 교육비         | 1,650만원        |
| 아이(i) 꿈수당         | 1,980만원        |
| <b>총계</b>         | <b>1억120만원</b> |

자료: 인천광역시(2024.2.14.),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1) 다만, 일부 보호아동(가정위탁·시설아동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동명의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을 통해 현금 적립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중앙정부 아동수당과의 관계: ‘보완적 제도’로서의 성격

- 아이꿈수당의 가장 큰 구조적인 특징은 중앙정부 아동수당이 지원하지 않는 8세 이상 연령 구간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국가 제도의 연령 공백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임.
  - 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정비 기조에 따라, 아동수당과 제도 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령 조건을 다르게 설정한 것임(인천광역시, 2024)
- 이에 따라 2026년 아동수당이 2017년생까지 상향됨을 고려하여, 인천시 사업 안내에서도 “2017년생 아동은 2025년까지 아이꿈수당을 지급하되, 2026년 이후에는 아동수당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즉, 아이꿈수당은 중앙정부의 제도 변화에 따라 정책 정합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하는 태생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

[그림 4] 아동수당과 아이꿈수당의 관계



자료: 연구진 작성

## ■ 정책 환경 변화: 제도 중첩 가능성의 발생

- 이처럼 2026년 정부 아동수당이 9세 미만(2017년생 포함)으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아이꿈수당 지급 대상과의 중첩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 이는 아이꿈수당이 기존의 ‘연령 공백 보완’ 기능만으로는 정책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함
- 따라서 향후 아이꿈수당은 중앙정부 제도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적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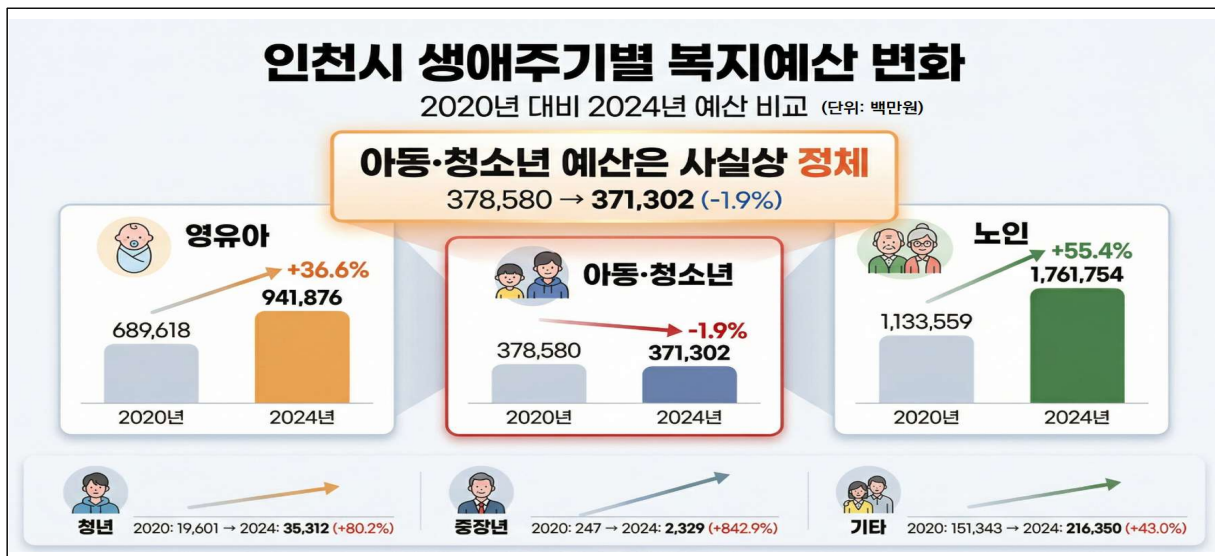
## 2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 사업의 주요 쟁점

### 1. 긍정적 기회

#### ■ (경제적 효과) 학령기 소득보장 공백 해소 및 실질적 양육부담 경감

- 중앙정부 아동수당의 확대는 단순한 연령 연장을 넘어, 아동기 전반의 소득보장 수준을 강화하여 아동 기본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님
- 특히 아동수당의 정책적 목표가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아동수당이 초등 학령기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에 지원이 중단되던 시기의 소득 공백이 완화될 수 있음
  - 이는 초등학교 진학 이후 돌봄·교육·사교육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공적 소득지원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음.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도 초등학생의 사교육비와 돌봄 수요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국가데이터처, 2026; 교육부, 2024)
- 또한, 인천시의 생애주기별 복지재정 지출 구조를 보면, 노인과 영유아 분야 예산은 증가한 반면, 아동·청소년 분야는 거의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로 아동·청소년 예산은 2020년 378,580백만 원에서 2024년 371,302백만 원으로 1.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영유아는 36.6%, 노인은 55.4% 증가함(장동열·김지정, 2025)
  - 이는 학령기 아동 가구에 대한 공적 이전지출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보편적 아동수당 확대는 학령기 유자녀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통해 실질적인 양육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림 5] 인천시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변화(2020년 대비 2024년 예산 비교)



자료: 장동열·김지정(2025)을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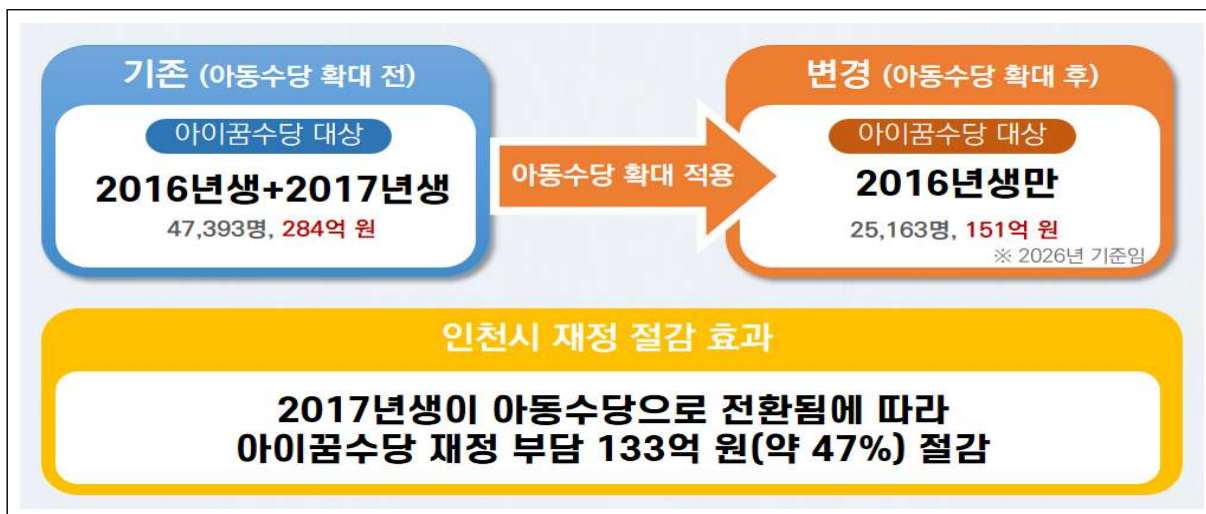
### ■ (정책 효과) 보편적 제도 확대에 따른 정책 체감성 및 수용성 제고

-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적 제도의 확대는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제와 행정 비용을 줄이고 제도의 권리성을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송혁, 2017; 임현규, 2019)
-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학령기로 확대됨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와 정책 수용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2026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되는 2017년생의 경우, 기존 인천시 아이꿈수당(지역화폐 5만 원)에서 정부 아동수당(현금 10만 원)으로 지원 수준과 방식이 상향됨에 따라,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이러한 보편적 제도의 확대는 향후 인천시가 아이꿈수당을 재편하거나 새로운 아동·가족정책을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 ■ (재정 효과) 중앙정부 자원 확대에 따른 단기적 재정 여력 확보

- 인천시 입장에서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확대는 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해 온 복지 사각지대, 즉 연령 공백 구간을 축소시킨다는 의미를 가짐. 이는 국비 유입을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단기적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로 2026년부터 2017년생이 정부 아동수당 체계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연령대에 전액 시비·군구비로 지급하던 아이꿈수당 지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결과적으로 절감된 재원을 활용하여 기존 아이꿈수당 사업의 질적 개선이나 새로운 아동·가족 정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그림 6] 기존 아이꿈수당 지급 대상자(2017년생)의 아동수당 전환 후 예산 절감 효과(2016년 기준)



자료: 인천시 내부자료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2. 정책적 위협 및 핵심 쟁점

### 1) 사회보장제도 유사·중복 문제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하여, 급여의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협의 제도는 국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방 간 사회보장제도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함으로써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함영진, 2019;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6: 3)
- 이러한 협의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기존 제도와의 관계, 특히 유사·중복 여부와 보충성 확보 여부이며, 이는 지자체 자체사업의 존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함

[표 1]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의 기준

| 법정 기준               | 주요 검토 항목  |
|---------------------|---|
| 1. 사업의 타당성          |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br>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br>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br>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br>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br>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br>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br>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
|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 ⑪ 재원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br>⑫ 재정집행의 효율성   |
| 5.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 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⑭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br>⑮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
| 6. 기타               | ⑯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br>⑰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 특히 기존 제도와의 관계 항목은 유사중복 여부 및 보충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본 연구의 주요 쟁점과 직접 관련된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2026). 2026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p.43.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시 아이꿈수당은 도입 당시 정부 아동수당의 연령 공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협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과 지방정부 사업 간 대상이 실질적으로 중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 경우 아이꿈수당은 '유사·중복 사업 정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도 유지의 정당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실제로 인천시는 2026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2017년생에 대한 아이꿈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해당 대상은 정부 아동수당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음
- 이는 중앙과 지방 간 급여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려는 협의 제도의 원칙이 실제 정책 운영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한편,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 규모가 작거나 일회성 성격을 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협의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대한민국 정책뉴스, 2026.1.2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6)
  - 이러한 변화는 협의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를 지원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아이꿈수당과 같이 보편적 대상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은 재정 규모와 정책 영향 측면에서 협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기 어려움
- 따라서 중앙과 지방 간 제도적 정합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향후 제도 간 기능 중복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임. 이는 곧 '유사·중복의 함정'을 피하면서 지방정부만의 고유한 복지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의 딜레마로 직결됨

## 2) 중앙-지방 관계 속 지방정부 역할의 딜레마

### ■ [구조적 제약] 중앙집중적 재정구조와 정책 자율성의 한계

-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재정관계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자율성은 제도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
- 전술한 대로 특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하에서 지방정부는 자체 복지사업을 설계할 때 중앙정부 제도와 중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음.
  -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복지사업이 유사·중복을 이유로 축소·조정되거나 국가 제도의 보충적 기능에 머무르게 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임현종·김남철, 2021; 원소윤, 2024)
  - 아울러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운영 역시 지방자치권을 제약한다는 법적·정책적 문제제기도 있어왔음(김종수, 2017; 원소윤, 2024)
- 반면, 북유럽 일부 국가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소득보장 틀 위에서 지방 수준의 보충적 지원을 허용하는 제도적 여지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예컨대 핀란드는 국가기관인 Kela가 사회부조를 담당하되, 지방 복지당국이 보충적·예방적 사회부조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특수한 필요를 재량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ECD

역시 핀란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2026; OECD, 2014)

- 덴마크 또한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집행 과정에서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며,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의약품비, 치과치료비, 이주비 등 특정 필요에 대한 추가 현금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Da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26; OECD, 2024)<sup>2)</sup>

○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절차와 중앙집중적 재정구조가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과 지역 맞춤형 복지 확대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줌

- 즉, 한국의 지방복지정책은 중앙정부 제도와의 정합성 및 재정통제 논리에 강하게 종속되는 반면, 북유럽 일부 국가는 중앙의 기본보장체계 위에 지방 차원의 보충적 지원을 결합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상대적으로 더 넓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 [행정적 딜레마] 합법적 추진 역량과 실무적 부담의 충돌

○ 한편, 법리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의 강한 정책 의지가 있을 경우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지는 존재함<sup>3)</sup>

○ 그러나 무리하게 협의를 우회하거나 강행할 경우, 중앙-지방 간 행정적 마찰과 사업 시행 지연이 발생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 따른 형평성 민원에 시달리게 됨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중앙 제도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작용함

○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는 대상 연령을 조정하거나 급여 방식(현금→바우처)을 변경하는 등 '우회적·차별화된 설계 전략'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온 것임

### ■ [인천시의 정책적 긴장] 재정 효율성과 정책 정체성 간의 선택

○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아이꿈수당을 축소·조정할 경우 재정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인천시 「아이플러스 1억 드림」과 같은 정책 브랜드의 독자성과 상징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반대로 자체사업을 유지·확대할 경우 정책의 정체성은 유지할 수 있으나, 제도 중복 논란과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다만 덴마크의 경우 지출 측면의 분권 수준은 높지만 자원 측면의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완전한 지방재정 자율성'보다는 지방 수준의 집행 재량과 보충적 지원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함(Da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24)

3) 2016년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도입할 당시,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대법원 제소를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한 바 있음. 이 갈등은 이듬해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상호 소송이 취하되면서 해당사업이 합법적으로 재개되고 현재의 제도로 정착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서울특별시, 2016.8.19.; 서울특별시, 2017.9.1.)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제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확대 전략을 취할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시 복지 브랜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면서도 제도 간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전략적 선택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임.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고려할 때, 향후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사업의 관계는 직접적인 중복보다는 대상의 다변화 또는 기능적 차별화 등의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 3) 재정의 역설: 단기 효율성과 중장기 매칭 부담의 병존

#### ■ 단기적 재정 완화의 착시와 국고보조사업의 구조적 함정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는 단기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특정 연령대(예: 2017년생)가 중앙정부 아동수당으로 편입되면서, 해당 연령대에 대해 인천시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던 아이꿈수당 지출은 감소하게 됨
- 그러나 절감된 자체 재원은 다른 한편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국가사업 의무지출로 상당 부분 상쇄되므로, 단기적 효과만으로 재정 여력이 실질적으로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아동수당이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국고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이며,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부담은 서울 50%, 지방 30% 수준임. 여기에 지자체별 사회복지비지수 및 재정자주도를 고려한 차등보조율(± 10)이 적용됨(보건복지부, 2025)
- 따라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매년 1세씩 확대될 경우, 대상자 증가에 비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 지방비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큼(고제이, 2018; 국회예산정책처, 2022)<sup>4)</sup>

[표 2] 2026년 아동수당 예산안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예산소요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대상자수      | 지급액       | 국비        | 지방비       |         |
|------|-----------|-----------|-----------|-----------|---------|
| 수도권  | 1,372,891 | 10만원      | 1,254,218 | 393,250   |         |
| 비수도권 | 일반지역      | 1,333,216 | 10.5만원    | 1,278,871 | 400,980 |
|      | 우대지역      | 97,200    | 11만원      | 97,677    | 30,626  |
|      | 특별지역      | 41,358    | 12만원      | 45,339    | 14,250  |

주: 모든 수혜대상이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자치단체별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안 산출시 활용하는 평균 국고보조율 76.13%를 적용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계상한 내용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p.249

4) 고제이(2018)는 아동수당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설계되면서 대응지방비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분담되고, 지역별 수급아동 분포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 법정 의무지출의 팽창을 초래하는 ‘재정의 역설’

- 이처럼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는 초기에는 자체사업 부담을 일부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누적시키는 ‘재정의 역설’을 발생시킴
  - 국회예산정책처는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위축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방비 부담 증가가 자체사업을 위한 일반재원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7)
  - 최근 연구에서도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매칭 지방비 지출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김보은·이학준, 2024)
- 따라서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만 이해하기보다, 단기적 재정효율성과 중장기적 매칭 부담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적 구조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천시처럼 자체 예산으로 아동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향후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효율성분 아니라, 누적되는 매칭 지방비 부담이 지방재정 운용과 기존 자체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 4) 연령 경계선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정책 격차

### ■ 단계적 확대의 한계: ‘연령 경계 효과’에 따른 코호트 역차별

- 또 하나의 쟁점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연령 경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임
  - 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2030년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대상이 확대되지만, 정작 정책의 최종 목표 연령대인 현재의 13세 미만(2014~2016년생)은 제도 확대의 혜택에서 배제됨
- 특히 2017년생과 2016년생은 동일한 생활주기와 유사한 돌봄·교육 수요를 가진 인접 코호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출생연도 1년 차이로 수급 여부가 엇갈리게 됨
  - 이에 대해 학부모 사이에서는 아동수당 확대 방식에 대한 강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이광식·남정민·정영호, 2025.8.25.; 송옥진·박경담, 2026.3.7)
- 이러한 현상은 복지제도의 문턱값(threshold)이 인접 집단 사이에 급격한 수급 단절을 만들어 내는 ‘연령 경계 효과(age-boundary effect)’이자 ‘소득지원 절벽(benefit cliff)’<sup>5)</sup>으로 간주될 수 있음(Anderson, T. et al., 2022)
- 따라서 이 문제의 본질은, 국가가 예산 절감을 이유로 채택한 ‘단계적 확대’ 방식이 실제 정책 체감 수준에서는 오히려 코호트 간 역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데 있음

5) 복지 절벽 또는 소득지원 절벽은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할 때 공공급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현상을 의미함(Anderson, T. et al.,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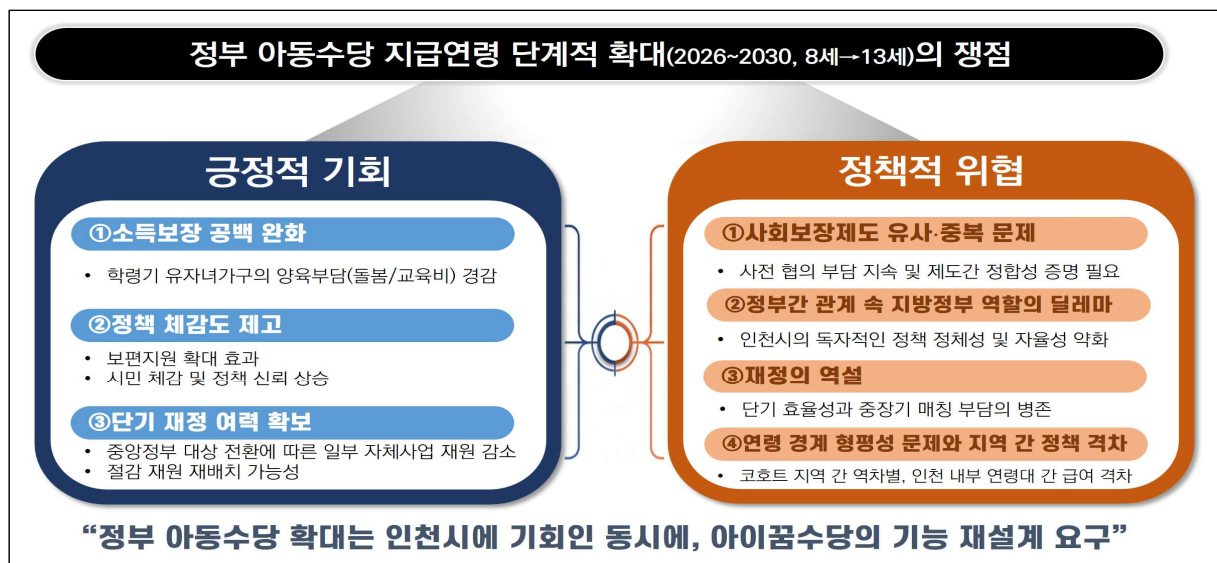
## ■ 국가 복지 공백을 메우는 인천시만의 보완적 안전망 입증

- 바로 이 지점에서 인천시의 아이꿈수당은 중앙정부의 단계적 확대가 만들어 낸 연령 경계 공백을 완충하는 보완장치의 역할로 기능한다는 것임
  - 현재 인천시의 아이꿈수당은 2016년생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중앙정부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무관하게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소득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타 지자체 2016년생 부모들이 경험할 수 있는 소득 지원 절벽과 비교할 때, 인천시는 이미 선제적인 정책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지역 간 정책 격차에서 우위를 점하여 좀 더 두터운 아동복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음

## ■ 인천시 내부 인접 연령대 간 급여 수준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 다만, 인천시 내부에서도 지급수준 측면에서 여전히 차이가 존재함
  - 인천시 2017년생은 중앙정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반면, 2016년생은 아이꿈수당 5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임
- 이는 동일한 생애주기 내 인접 집단 간 지원 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 형평성에 대한 민원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종합하면, 해당 이슈는 연령 경계 효과에 따른 코호트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국가 복지 공백을 메우는 인천시만의 보완적 안전망 기능, 동시에 인천시 내부 지원 수준 격차가 결합된 복합적 쟁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 결국 이러한 사례는 지방정부 자체사업이 단순히 보완 기능을 넘어, 정책 형평성과 체감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7]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 사업의 주요 쟁점



자료: 연구진 작성

### 3. 소결: 인천시에 주는 시사점

####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아이꿈수당의 지속가능성 재검토 필요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는 인천시 유자녀 가구의 학령기 소득보장 공백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실질적인 양육부담 경감과 정책 체감도 제고, 나아가 인천시 재정의 단기적 완화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기회를 제공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① 아이꿈수당과의 유사·중복에 대한 행정적 제약, ② 중앙-지방 간 역할 재조정 의 딜레마, ③ 장기적인 대응지방비 부담 증가, ④ 연령 경계에 따른 코호트 간 형평성 문제 등 복합적인 제약요인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음
- 당초 아이꿈수당은 8세 이후 학령기 전 기간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장기 구상 아래, 정부 제도의 연령 공백을 메우는 '보완 장치'로 설계되었음. 그러나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기존의 핵심 명분이 축소되면서, 기존과 같은 단순 연령 보완형 사업 구조만으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함

#### ■ '단순 보완'을 넘어선 기능 재설계 필요

- 이에 따라 아이꿈수당은 단순한 보완적 현금지원의 성격을 넘어, 중앙정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정책적 차별성과 기능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 아이꿈수당은 중앙정부의 보편적 현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인천시 고유의 복지 브랜드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정체성을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그 목적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함

#### ■ 다양한 정책 선택지에 대한 전략적 검토 필요

- 이에 현재 인천시에 요구되는 것은 기존 사업을 단순 유지하거나 축소할 것인지의 선택을 넘어, 아이꿈수당의 대상, 범위, 지급방식, 정책 목적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임
-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현행 유지, 추가지원, 차등 보완, 대상 연령 재설계, 자산형성 기능 전환 등 아이꿈수당의 다양한 정책 선택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3 인천시 아이꿈수당 정책 대응 방향

#### 1. 정책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는 인천시 입장에서는 2017년생 등 정부 편입 연령대에 대한 ‘아이꿈수당 자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매칭 지방비(시비·군구비) 증가’라는 재정적 부담을 동반함
  - 따라서 두 재정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가용 재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제약을 전제로, 본 절에서는 아이꿈수당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정책 선택지를 검토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첫째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에 관한 ‘대상 설계 차원’(1~4안)이며,
  - 둘째는 급여의 형태와 정책 기능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기능 설계 차원’(5안)임

#### 1) 대상 및 연령 중심 재설계

##### ■ 현행 유지형(1안): 2016년생 경계코호트 지원

- **(내용)**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업구조를 큰 폭으로 바꾸지 않고,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에도 국가 제도에 편입되지 않는 경계 연령대만을 사실상 지원하는 방식임
  - 즉 정부 아동수당 확대 계획에서 제외되는 2016년생에게 기존 아이꿈수당(월 5만 원)을 계속 지급하는 방식임
- **(장점)** 이 방식은 제도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중앙정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령 경계의 사각지대를 인천시가 직접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2016년생은 바로 아래 연령인 2017년생이 정부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인천시만의 정책적 차별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될 수 있음
- **(단점)** 다만 이 방식은 어디까지나 과도기적 대응에 가까움
  - 아이꿈수당의 도입 취지가 국가 아동수당 종료 이후의 연령 공백을 메우는 데 있었다면, 중앙정부가 그 공백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순간 기존 사업의 정당성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 결국 현행 유지형은 2016년생이라는 특정 코호트 보호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사업 전체의 장기적 존립 논리를 새롭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결국 이 시나리오는 정책 연착륙에는 유리하지만 아이꿈수당의 미래 기능을 설명하는 전략으로는 다소 소극적임

## ■ 추가 지원형(2안): 중앙정부 아동수당에 더해 인천시가 일정액을 보완 지급

- (내용)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중앙정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도 인천시가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임
  - 이는 아이꿈수당을 연령 공백 보완사업에서 나아가, '급여 충분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임. 그 배경에는 현행 아동수당의 절대적 급여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에 기인함
  -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도입 이후 월 1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해외 주요국들이 더 높은 지급연령과 다양한 조정기준(예: 물가연동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 확대만으로는 실제 양육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함(박은정, 2024; 전아름, 2026.3.2.)
  -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국가 아동수당에 일정액을 추가 지급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편급여를 지역 차원에서 실질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장점) 이 방식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최소 기준 위에 지역 차원의 생활밀착형 지원을 엮는다는 메시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인천시 정책의 선도적 상징성을 부각할 수 있음
  - 예컨대 아동수당에서 제외된 2016년생에는 현행 수준(월 5만 원)을 유지하고, 아동수당 편입 코호트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경우, 사각지대 보완을 넘어 인천시 유자녀 가구의 실질적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음
- (단점) 그러나 추가지원형은 중앙정부의 급여에 지자체가 덧붙이는 구조이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과정에서 유사·중복성 논란을 벗어나기가 어려움
  - 또한 특정 연령집단만 아동수당과 아이꿈수당을 중복 수급할 경우, 같은 아동기 후반 집단 내부에서 수혜 격차 및 형평성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무엇보다 정부 확대에 따른 매칭 지방비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중 지급을 위한 막대한 자체 시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큰 한계임
-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급여 충분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재정부담과 함께 제도 정합성 및 형평성에 대한 정교한 설계 또한 요구됨

## ■ 선별적 차등 보완형(3안): 보편급여에서 선별적 차등 지원으로 전환

- (내용)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이꿈수당의 보편적 동일지급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큰 집단에 대해 차등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임
  - 예를 들어, 2016년생 전체에게 동일하게 5만 원을 지급하기보다 일부 재원을 활용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에 2~3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함
- (장점) 이 접근은 제한된 재원을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음
  -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전체 유자녀 가구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이 일정 부분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보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육부담이 큰 가구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음

- **(단점)** 하지만 아이꿈수당의 정체성을 크게 바꾸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아이꿈수당은 저소득층 선별지원사업이 아니라, 정부 아동수당 종료 이후의 학령기 공백을 메우는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도입되었음. 따라서 이를 취약계층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인천시 고유의 보편적 복지 브랜드로서 아이꿈수당이 지닌 상징성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질 수 있음.
  - 또한 취약계층 중심 지원은 별도의 맞춤형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함
- 결국 이 시나리오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는 유리하지만, ‘아이꿈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유지할 경우 사업 목적의 일관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 ■ 대상 연령 확대형(4안): 정부 연동형(Sliding) 대상 재편을 통한 정책 주도권 확보

- **(내용)** 네 번째 시나리오는 아이꿈수당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되, 중앙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맞추어 적용 구간을 재조정하는 방식임. 이는 크게 두 가지 설계가 가능함
  - 첫째, 중앙정부 아동수당이 닿지 않는 이후 연령대, 예컨대 중·고등학생 구간까지 지원 대상을 한번에 확장하는 방식임. 이 경우 인천시는 국가가 13세 미만까지만 포괄하는 구간 이후를 선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령기 후반과 청소년기 양육·교육 부담에 대응하는 독자적 복지모형을 구축할 수 있음
  - 둘째, 중앙정부 확대 일정에 연동하여 지원 시작 연령을 1~2세 앞서 또는 뒤이어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임. 즉 중앙정부가 9세까지 확대하면 인천시는 그 다음 연령부터 일정 연령까지 지원하고, 이후 정부 기준이 다시 확대되면 인천시도 자동적으로 지원 구간을 뒤로 이동시키는 방식임. 이는 아이꿈수당의 당초 도입 취지인 ‘연령 공백 보완’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됨<sup>6)</sup>
- **(장점)** 이 시나리오는 인천시의 독자성과 정책 선도성을 부각하면서도 중앙정부와의 직접 중복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다음 연령대를 지방정부가 맡는 구조는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도 부합함. 또한 인천시가 기존 사업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확대를 전제로 지원 구간을 유연하게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논리도 분명함
- **(단점)** 다만 이 방식은 대상 확대만큼 예산이 증가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짐. 대상 연령을 넓힐수록 지급액을 유지하기 어렵고, 반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줄이면 기존 수혜자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이미 형성된 급여 기대 수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급액 감액은 경로의존성에 따른 정책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높으나, 재정 부담과 시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설계가 필수적임

6) 추가로, 아동수당 확대 과정에서 최종 확대 연령(13세)에 이미 도달한 코호트는 단계적 확대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인천시가 과도기적으로 13세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이는 연령 경계에 따른 불이익을 일부 완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특정 경계 연령만을 보완하는 제한적 대안이므로, 출생 코호트별 수급 공백과 지원 연속성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함

## 2) 지급방식 및 정책 기능 전환

### ■ 기능 전환형(5안): 소비 보완에서 자산형성 지원으로의 재설계

- **(내용)**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아이꿈수당의 지급형태와 정책 목적을 전면적으로 재설정하는 방식임. 핵심은 현행 바우처성 또는 현금성 지원을 단순 소비 보전이 아니라 아동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수요자에게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예를 들어, 부모가 기존처럼 생활지원형 포인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동일 금액을 저축계좌나 적립계좌에 적립할 경우 인천시가 연말 인센티브나 추가 이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음(채은경 외, 2025). 이 경우 지급 목적은 “현재의 소비 보전”에서 “미래의 교육·자립 준비를 위한 자산축적”으로 전환됨
- 이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실제 아동수당 사용 행태가 단순 소비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임. 이소영·이지혜(2024)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주요 사용처로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다음으로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투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고, 임현규(2019)에서도 아동수당 수급 이후 “저축 가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8.1%, 실제 사용처 중 “저축·보험”이 3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부모들이 아동수당을 단순 월간 소비 재원만이 아니라 미래 대비 재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이꿈수당을 자산형성사업으로 재구성하는 데 일정한 현실적 근거를 제공함
- 또한 이러한 자산형성 기능으로의 전환은 행정적·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실현가능한 방안임. 실제 인천시 아이꿈수당 운영 방식을 보면, 일반 아동에게는 인천e음 포인트를 지급하지만,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에는 이미 예외적으로 아동 명의의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이는 기존 급여체계 내에서도 특정 대상을 위한 자산형성 계좌 연계방식이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일반 아동을 위한 선택적 자산형성 기능으로 확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전혀 무리가 아님
- **(장점)** 이 시나리오는 인천시가 아이꿈수당을 자산형성형 선택사업으로 재구조화할 경우, 중앙정부의 보편 현금급여와 직접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는 브랜드의 미래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이는 중앙정부의 수당(현금)과의 중복 논란을 완벽히 해소하는 전략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무엇보다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정책수용성과 체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큼
- **(단점)** 물론 이 방식에도 한계는 있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 자산형성 또는 자립지원 제도 도입 여부와의 관계임

- 실제로 국회에서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매월 10만 원을 펀드 형식으로 적립·운용하여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 자립 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이 발의되었고(임광현 외, 2024), 현재 중장기 도입을 목표로 정책논의가 진행 중임. 향후 이러한 정부 차원의 유사한 보편적 자산형성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인천시 사업은 다시 중복성 논란에 직면할 수 있음
- 또한 생활비 보전이 시급한 가구에겐 자산형성 방식이 정책 체감도가 낮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기능 전환형은 초기에는 생활지원형과 자산형성형의 선택제로 도입하고, 수요자의 이용행태와 선호를 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일 것임

[표 3] 정책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 구분 | 정책 시나리오               | 정책 개요<br>(주요내용)  | 장점<br>(기대효과)  | 단점<br>(한계)  |
|----|-----------------------|--|---|---|
| 1안 | 현행 유지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서 배제되는 경계 연령대(2016년생)에게만 기존 월 5만 원 지속 지급</li> <li>• 사업 형태(인천e음 포인트) 유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제도와 직접적 중복을 회피할 수 있어 제도 적합성 확보에 유리</li> <li>• 2016년생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정부 사각지대 보완 (인천시만의 방어선 구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도입 취지(연령 공백 해소)가 중앙정부 확대에 의해 대부분 해소되어 사업의 장기적 존립 논리 부족</li> <li>• 대상 축소에 따른 정책 영향력 과 체감도 감소 가능성 있음</li> </ul>         |
| 2안 | 추가 지원형<br>(급여 충분성 보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 대상자(또는 특정 코호트)에게 인천시가 별도의 추가 수당 지급</li> <li>• 10년째 동결된 정부 아동수당의 한계 극복</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방치한 '낮은 급여 수준' 문제를 보전하여 유자녀 가구의 실질적 양육부담 경감</li> <li>• 국가 최소 기준 위에 생활밀착형 지원을 더하는 인천시의 선도적 상징성 부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연령 중복 수급에 따른 형평성 논란 유발</li> <li>• 정부 제도와 유사·중복성 문제 발생</li> <li>• 매칭 지방비와 더불어 막대한 자체 시비 부담 발생(실현성 낮음)</li> </ul>       |
| 3안 | 차등 보완형<br>(선별적 지원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 지급을 탈피, 일부 재원을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필요가 큰 집단에 차등(추가)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된 재원을 양육부담이 큰 가구에 집중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정책 효과성 증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아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이꿈수당의 당초 도입 목적 및 정책 정체성 훼손</li> <li>• 선별적 지원(특히 취약계층 지원)은 별도 맞춤형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반론 존재</li> </ul> |
| 4안 | 연령 확대형<br>(정부 연동/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적용 구간을 정부 변화에 맞춰 뒤로 이동</li> <li>- ①중·고교생 등으로 한 번에 일괄 확장</li> <li>- ②정부보다 1~2세 앞서/뒤 이어 연동 적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포괄성 확보</li> <li>• 정부 미지원 연령대를 맡아 유사·중복 회피(제도 적합성 부합)</li> <li>• 인천시 독자성과 정책 선도성 확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포괄성이 넓어지는 만큼 구조적 예산 증가</li> <li>• 예산 한계로 1인당 지급액 삭감 시 기존 수혜자들의 강한 반발 예상</li> </ul>                                    |
| 5안 | 기능 전환형<br>(자산형성 재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목적을 소비 보전에서 미래 자산형성 지원(저축 시이자/인센티브 제공)으로 목적 전환</li> <li>• 부모에게 인천e음 포인트와 자산형성계좌 간 선택권 부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현금수당과의 유사·중복 논란 완벽 해소</li> <li>• 부모의 저축 수요(선호) 반영 및 선택권 부여로 정책 체감도 향상</li> <li>•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미래지향성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의 '아이자립펀드' 등 향후 국가 자산형성 제도 신설 동향 모니터링 필수(장기적 적합성 고려 필요)</li> <li>• 당장 생활비가 급한 가구에겐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음</li> </ul>        |

자료: 연구진 작성

## 2. 인천시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제언

### ■ 국가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천시 자체사업의 선도적 의의

- 중앙정부의 획일적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 이러한 점에서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일환인 ‘아이꿈수당’은 국가 복지의 공백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이 사업은 중앙정부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학령기 구간에 대해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라는 점에서, 국가 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 단위 정책 실험의 성격을 지님. 아울러 연령별·생애주기별 지원구조를 자체적으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인천시 아동정책의 독자성과 정책 주도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연령 확대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이 형성됨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 전략은 단순히 기존 사업을 방어적으로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차원을 넘어, 아이꿈수당을 어떠한 정책 기능으로 재배치할 것인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 인천시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취사 선택

-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인천시의 여건과 특수성에 비추어 검토하면, 우선 현행 유지형(시나리오1)은 과도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장기 전략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함. 또한 추가지원형(시나리오2)은 정책적 상징성과 급여 충분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으나 형평성 및 중복성 논란이 큼. 또한 향후 확대될 대응지방비 부담 등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가 급여 지급 방식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별적 차등 보완형(시나리오3) 역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인천시의 인구 유입 규모와 상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출생 기반을 고려할 때 자녀 수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이 시민 전반에 대한 강한 정책 유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더불어 이는 아이꿈수당이 지녀 온 보편적 지원 성격과 사업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음
- 따라서 제도 정합성, 재정 지속가능성, 그리고 인천시 복지 브랜드의 독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정책 논의의 중심축은 중앙정부 확대 흐름에 맞추어 연령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연동형 대상 재설계 전략(시나리오4)’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자산형성 중심 기능 전환 전략(시나리오5)’ 사이에서 형성될 필요가 있음

## ■ 대상 연동형과 자산형성 기능 전환의 전략적 결합

- 첫째, 중앙정부 연동형 대상 재설계는 선제적 연령 확대를 통해 정책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중앙정부 아동수당이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더라도, 아이꿈수당은 당초 18세까지의 학령기를 포괄하도록 설계된 바 있음. 이러한 선도적 방향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확대 일정에 연동하여 인천시가 지원 구간을 한 템포 앞서거나 또는 이후 연령대로 재배치하는 방식이 마련된다면, 아이꿈수당의 도입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 제도와 직접적 중복 가능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음
- 둘째, 자산형성 중심 기능 전환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정책 정체성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완성하는 핵심 대안임. 대상 연령의 재설계와 함께 급여의 성격을 단순 소비 보전에서 자산형성 지원으로 전환한다면, 아이꿈수당은 단순한 현금지원 사업을 넘어 아동의 미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생애주기형 투자정책으로 진화될 수 있음
  - 다만, 향후 중앙정부의 '아이지립펀드' 등 국가 단위 자산형성 정책의 도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가 제도와 직접적 중복 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은 각각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전략적 차원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접근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음
  - 연동형 재설계가 지원 대상과 연령 구간의 조정에 초점을 둔 전략이라면, 자산형성 전환은 지원 방식과 정책 기능의 차별화에 초점을 둔 전략이기에 상호 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2~3년 내에는 중앙정부와 직접 중복되는 구간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가 차별화할 수 있는 연령대(예: 학령기 후반)에 자산형성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함. 이를 통해 제도 중복을 완화하면서도 사업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결어

- 결론적으로 인천시는 우선 2016년생 등 과도기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연동형 대상 재설계와 자산형성 기능 전환을 중심으로 아이꿈수당의 단계적 개편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아이꿈수당을 단순한 보완적 현금지원 사업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중앙정부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인천시만의 정책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 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아울러 후속단계에서는 각 시나리오별 대상 추계와 소요예산(국비와 대응지방비 포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이꿈수당의 단계적 이행방안과 실행 로드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부록

아이꿈수당 연령별 지급 개요

| 단계<br>증액  | 5만 원 |      |      |      | 10만 원 |      |      |      | 15만 원 |      |      |      |      |      |      |      |      |      |      |    |
|-----------|------|------|------|------|-------|------|------|------|-------|------|------|------|------|------|------|------|------|------|------|----|
|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28년  | '29년 | '30년 | '31년 | '32년  | '33년 | '34년 | '35년 | '36년 | '37년 | '38년 | '39년 | '40년 | '41년 | '42년 |    |
| '16<br>년생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      |      |      |    |
| '17<br>년생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      |      |    |
| '18<br>년생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      |    |
| '19<br>년생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    |
| '20<br>년생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
| '21<br>년생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 '22<br>년생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 '23<br>년생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 '24<br>년생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
| '25<br>년생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
| '26<br>년생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16세  |    |
| '27<br>년생 |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15세  |    |
| '28<br>년생 |      |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14세  |    |
| '29<br>년생 |      |      |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13세  |    |
| '30<br>년생 |      |      |      |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12세  |    |
| '31<br>년생 |      |      |      |      |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11세  |    |
| '32<br>년생 |      |      |      |      |       |      |      |      |       |      |      |      |      |      |      |      | 8세   | 9세   | 10세  |    |
| '33<br>년생 |      |      |      |      |       |      |      |      |       |      |      |      |      |      |      |      |      | 8세   | 9세   |    |
| '34<br>년생 |      |      |      |      |       |      |      |      |       |      |      |      |      |      |      |      |      |      |      | 8세 |

※ 지급 연령 개요: 사업 설계일(2024.1.1.) 기준으로 작성, '42년 이후 연령별 구간표는 추후 계획에 따라 반영 예정

자료: 인천광역시(2026). 아이(i) 꿈 수당 지급 사업 업무 매뉴얼(4차 개정). 내부자료

## 참고문헌

### [보고서]

- 고제이. (2018).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보건복지포럼, 256, 7-21.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규모 국고보조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2018).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자고위원회 소관].
- 국회예산정책처. (2022).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 (2026). 2026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II.
- 김보은·이학준. (2024).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행정학회보, 21(1), 105-125.
- 김종수. (2017). 사회보장 협의 및 조정제도에 관한 검토. 사회보장법연구, 6(2), 289-322.
- 박은정. (2024). 아동 대상 현금급여 제도의 통합적 개편 방향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25). 2025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2026). 2026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송혁. (2017). 복지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선별적 제도와 보편적 제도의 경험차이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가희·장동열. (2024). 양육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원소윤.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성과 및 개선 방안. 보건복지포럼 12, 53-62.
- 이소영·이지혜·이철희. (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이지혜. (2024).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448, 1-8.
- 인천광역시. (2024). 아이(i) 꿈 수당 지급 계획(안), 내부자료
- 인천광역시. (2026). 아이(i) 꿈 수당 지급 사업 업무 매뉴얼(4차 개정), 내부자료
- 임현규. (2019). 아동의 보편적 권리, 아동수당. 육아정책포럼, 61, 25-30.
- 임현종·김남철. (20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 사전협의제도-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연구, 71, 21-23.
- 장동열·김지정. (2025). 인천시 사회복지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인천연구원.
- 채은경·이정영·양지훈·장동열·박수빈. (2025). 시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인천형) 생애주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 함영진. (2019).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제도 현황 및 과제. 보건복지포럼, 277, 6-17.
- Anderson, T., Coffey, A., Daly, H., Hahn, H., Maag, E., & Werner, K. (2022). *Balancing at the Edge of the Cliff*. Urban Institute: Washington, DC, USA.

### [보도자료]

- 교육부. (2024).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7914&lev=0&sea>

- 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검색일: 2026년 3월 22일)  
대한민국 정책뉴스. (2026.1.20.).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개편 관련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56740459>(검색일: 2026년 3월 23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2.4.). 아동수당 확대로 양육 지원 강화된다...「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981&tag=&nPage=1](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8981&tag=&nPage=1)(검색일: 2026년 3월 5일)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2026.3.23.). 아동수당 연령·금액 동시 확대...비수도권 최대 월 3만 원 추가 지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286#:~:text=%EC%95%84%EB%8F%99%EC%88%98%EB%8B%B9%20%EC%97%B0%EB%A0%B9%C2%B7%EA%B8%88%EC%95%A1%20%EB%8F%99%EC%8B%9C%20%ED%99%95%EB%8C%80%E2%80%A6%EB%B9%84%EC%88%98%EB%8F%84%EA%B6%8C%20%EC%B5%9C%EB%8C%80%20%EC%9B%94%203%EB%A7%8C%20%EC%9B%90%20%EC%B6%94%EA%B0%80%20%E C%A7%80%EC%9B%90>(검색일: 2026년 3월 5일)
- 서울특별시. (2016.8.19.).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대법원에 제소.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020981>(검색일: 2026년 3월 19일)
- 서울특별시. (2017.9.1.). 서울시-복지부 '청년수당' 소송 취하...향후 협력키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109615>(검색일: 2026년 3월 19일)
- 송옥진·박경담. (2026.3.7.). 매월 '10만원 아동수당' 2017년생까지만...어째서?.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522410001507?did=NA>(검색일: 2026년 3월 17일)
- 이광식·남정민·정영호. (2025.8.25.). “같은해 태어났는데 550만원 차이”...2017년생 아동수당 똑같이 주기로.  
한경.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2507711>(검색일: 2026년 3월 16일)
- 인천광역시. (2024.2.14.).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 카드뉴스.  
<https://www.incheon.go.kr/IC010601/2172103>(검색일: 2026년 3월 16일)
- 전아름. (2026.3.2.). 2017년생 다시 아동수당 받는다..'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육연론[창].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13>(검색일: 2026년 3월 17일)

## [웹사이트]

- 국가데이터처. (2026).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69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697)(검색일: 2026년 3월 22일)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2026). Social assistance.  
<https://stm.fi/en/income-security/social-assistance>(검색일: 2026년 3월 22일)
- Da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26). Social Policy in Denmark.  
[https://www.english.sm.dk/Media/638917215052924687/FINAL\\_Social\\_Policy\\_in\\_Denmark\\_UA.pdf](https://www.english.sm.dk/Media/638917215052924687/FINAL_Social_Policy_in_Denmark_UA.pdf)(검색일: 2026년 3월 23일)

## [전자문서]

관계부처합동. (2025).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

임광현·정일영·정태호·박홍근·정성호·김영환·최기상·윤호중·정준호·김정호·강준현·조승래·임미애·황명선·신영대·황정아·김성환·서영석·황희. (2024.6.17.). [22005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https://pal.assembly.go.kr/napal/lgs/tpa/lgs/tpaDone/view.do?lgs/tpaId=PRC\\_K2J4K0I6I0H5H0P9O0O3M1N2M1M2I5](https://pal.assembly.go.kr/napal/lgs/tpa/lgs/tpaDone/view.do?lgs/tpaId=PRC_K2J4K0I6I0H5H0P9O0O3M1N2M1M2I5)(검색일: 2026년 4월 20일)

OECD. (2014). Local Public Finances and Municipal Reform in Fin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4/06/local-public-finances-and-municipal-reform-in-finland\\_g17a24cd/5jz2qt0zj024-en.pdf](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14/06/local-public-finances-and-municipal-reform-in-finland_g17a24cd/5jz2qt0zj024-en.pdf)(검색일: 2026년 3월 23일)

OECD. (2024). Tax and Benefit Policy Descriptions for Denmark 2024.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incomes-support-redistribution-and-work-incentives/TaxBEN-Denmark-latest.pdf>(검색일: 2026년 3월 23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최계운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http://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